



[금융]
흥국생명
결국 콜옵선 행사
혼란 불식 기대감
06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코스닥
2424.41 (+25.37)	714.60 (+1.27)
금리 (우고채 3년)	환율 (원·달러)
4.086 (-0.070)	1364.80 (-20.10) (9일)

여야 속도내는 납품단가연동제 ‘상생’-‘효율’ 사이 점점 찾아야

野 이어 與 당론 발의 추진
적용업종 연동수준은 이견
의무화 땀 시장외곽 우려도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정기국회 주요 입법 사안이 되면서, 국회가 ‘상생’과 ‘경제적 효율’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과 수·위탁 거래 계약에서 원자재와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조항을 포함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납품단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가격 상승

분을 온전히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관련 논의는 급속도로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납품단가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통해 자율적인 거래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력의 차이로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반기 원 구성과 함께 설치됐던 국회 민생

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지난달 31일로 활동을 종료하며 불발됐다. 적용 업종과 연동 수준에서 이견이 있었다. 반면, 여야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며 각 당 내부에서 정기국회 입법사안으로 삼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 등 납품단가연동제 2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가능성을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 기업은 의무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

고, 표준계약서 미작성이나 계약 내용 미이행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으면 가격 변동의 대상이 된다.

여당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수현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 등 주무부처와 입법 계획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5면>

다만, 입법을 반대하는 측에선 연동제를 표준계약서 상에 의무화하면 오히려 시장참여자들의 선택이 왜곡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미디어 ‘제7회 뉴테크놀로지포럼’

가상인간과 메타버스 초거대 AI의 미래 전략

최근 인공지능(AI) 분야 최대 이슈는 초거대 AI 개발과 가상인간입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초거대 AI 모델과 AI 언어모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검색, 비서, 쇼핑 등에도 초거대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몰입감 높은 가상융합 공간과 디지털 휴먼 등을 구현하는 기술인 XR(가상융합) 형태의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 및 관련 산업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확장현실(XR),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블록체인 등 범용 기술의 복합체입니다. 이처럼 AI와 메타버스 기술은 이미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AI, 메타버스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초거대 AI, 가상인간과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AI의 개발 흐름과 기능, 가상인간의 최신 트렌드, 메타버스의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메타버스 및 AI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전략을 세우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 주 제 : 초거대 AI, 가상인간과 메타버스
- 일 시 : 2022년 11월 23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르마타워 페럼홀
- 강 연 : 김정대 동양대학교 게임학과 교수, 김명준 SKT A.(에이닷)대화 담당, 이근복 마이크로소프트 AI협력팀 상무, 윤영진 네이버 AI사업개발 리더, 유지형 제네시스랩 기업부설연구소 AI연구팀장,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 의 : 2022 제야·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metro



메트로경제 ‘2022 반도체 포럼’ 성료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2 반도체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수소기업 600곳 육성, 수소상용차 3만대 보급 추진

새정부 첫 수소경제위원회
생태계 조성위해 수요 창출 등
수소경제 이행 3대 전략 제시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600개를 육성하고 수소상용차 3만대, 충전소 70곳을 구축하는 등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오후 롯데호텔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수소경제

위원회(제5차)를 개최하고 국정과제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3대 수소경제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송·발전·산업 부분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에 나선다. 수소버스·트럭의 구매보조금을 확대하고, 지자체 대상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지원 시범사업, 경찰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수소버스 취득세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등을 추진

한다. 수소 50%, 암모니아 20% 이상 혼소 발전을 위해 2027년까지 기술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혼소 발전을 확산시킨다.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을 통해 연료전지 보급을 확산시키고 소형 수소 터빈, 수소엔진 등을 개발해 분산자원을 다양화한다.

수소 유통 인프라도 마련한다. 연간 4만톤 규모의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선

제 구축하고 보조금 확대, 기술개발 지원으로 액화충전소를 확대해 나간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400만톤급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LNG 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10만톤급 액화수소 인수기지과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한다.

국내외에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와 공급망 구축에도 나선다. 2026년까지 친환경 암모니아 추진 운반선, 2029년까지 액화수

소 운반선 건조도 추진한다.

청정수소 시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수소사업법을 제정해 수소 유통단계별 사업자를 정의하고 수송·발전 등 분야별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2023년까지 청정수소 기준과 인증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를 2024년까지 도입한다.

2030년까지 수소산업 핵심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수출산업화 촉진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반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현재 2개인 글로벌 1위 품목을 10개로 늘리고 현재 52개사인 수소전문기업을 600개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7대 전략 분야(수전

해, 액화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충전소, 연료전지, 수소터빈)에서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수소로 업종을 전환한 기업도 예비전문기업으로 정해 지원키로 했다.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수소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전문기관을 신설해 수소산업 저변 확장에 나선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5대 유망분야(수소모빌리티, 발전용 연료전지, 수전해 시스템, 액화수소 운송선, 수소충전소)는 실증과 트랙레코드 확보를 통해 수출상품화를 지원해 해외시장 선점에 나선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취임 6개월尹 대통령, 이태원 참사-北도발 관리 최대 과제로
- ▲ 국방부, 북한 도발 미사일 잔해 공개…SA-5 지대공 미사일로 판명 /사진 뉴시스

- ▲ 인파 밀집도 따라 위기경보 발령 추진… 사상자 공개 불가
- ▲ ‘대응 부실’ 수사받는 용산소방서장…소방 당국 “적극 지휘”



- ▲ 이재명 대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대응 나선 소방관 격려 /사진 뉴시스
- ▲ 여야, 윤리특위 구성 합의…국민의힘·민주당 6명 ‘동수’